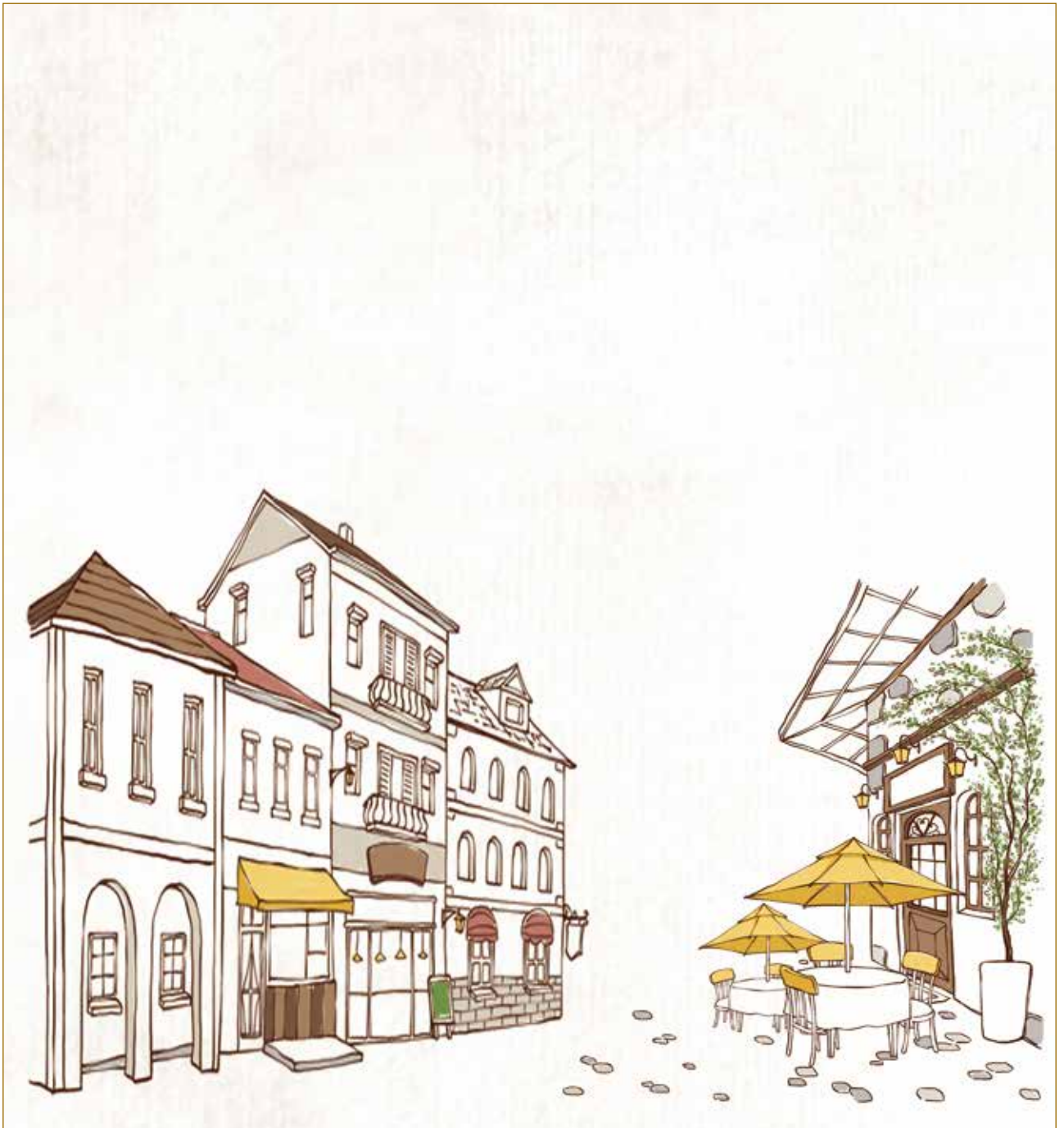


# 도시개혁

특별기획

## 경실련 도시정책

총간소음 해결 위해 관련 법률 개정해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도시개혁센터 6대 이사장 황희연 교수 인터뷰





# 경실련 도시정책



도시개혁 2023년 (겨울호/재창간 3호)  
 통권 25호  
 소재지 0308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동숭동)  
 발행인 백인길  
 발행일 2023. 01. 27.  
 발행처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인쇄 해원문화사  
 사진 경실련도시개혁센터  
 편집 및 교정 윤은주

창립발기문 0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칼럼 04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특별기획 10 중간소음 해결 위해 관련 법률 개정해야  
 (경실련 도시정책) 13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16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19 윤석열 정부 100일의 균형발전, 공약을 기반으로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22 2022년 새 정부의 도시재생은?

나, 너 그리고 26 미래도시(스마트시티)의 전제조건(도시숲 조성)  
 우리의 도시 29 부산경실련 - 아파트 중심의 (구)한국유리부지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칼럼 34 도시개혁센터 6대 이사장 - 황희연 교수 인터뷰  
 39 판교신도시 성공인가? 실패인가?  
 42 과밀도시의 통근자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46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이사 백인길(이사장) 최봉문 김근영 황지욱 권 일 윤순철 배응규 이계선 홍경구 나경준 김형욱  
 운영위원 김근영(운영위원장) 황지욱(정책위원장) 권일(도시대학장) 박영민 최성진 진광성 김정곤 김민완 한상훈  
 주거분과 박영민(분과장) 김진오 최종익 이상현  
 안전분과 김정곤(분과장) 이호신 정영일 박근오  
 재생분과 최성진(분과장) 강미현 유성하 김천일  
 교통분과 진광성(분과장) 백남철 조은경  
 숲분과 김민완(분과장) 안정준 김무성 안세원 최광걸 우선희 윤영주 박현준  
 고문 권용우 최병선 이명호 홍 철 김수삼 하성규 이정식 황희연 류중석 최봉문  
 편집위원 황지욱(위원장) 박영민 김정곤 최성진 진광성 김민완  
 사무국 윤은주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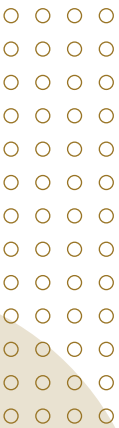
## 창립발기문 1997.6.28

오늘 우리는 지난날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된 우리의 도시를 살 맛나는 삶의 터전으로 혁신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굳게 믿고 도시개혁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를 창립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은 초고속의 도시화로 이어져 국민의 85%가 도시에 사는 도시국가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은 낙후성을 면치 못한 채 오히려 건강한 삶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폭발과 붕괴의 참사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는 폐수와 매연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땅과 바다는 폐기물과 화학물질로 황폐화되고 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힌 시가지와 차량으로 가득찬 도로는 우리 도시를 인간성을 상실한 황량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전래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는 저급한 외래문화에 의해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삭막하고 물인정한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날 우리사회의 지배적 가치였던 성장지상주의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 무엇이든 빠르고, 크고, 많은 것이 최선으로 인정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졸속, 획일, 물질만능, 전통단절, 이기주의와 같은 부정적 행태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절대 빈곤을 극복해야만 했던 지난날의 상황을 상기한다면 성장지상주의는 당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삼는 오늘날에는 성장제일주의가 그대로 통용될 수 없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21세기의 선진국 진입을 바로 앞 둔, 도시화와 산업화의 100년을 매듭짓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발과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 있던 삶의 질의 문제를 진지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여러 사례와 리우 환경회의 및 이스탄불 도시정상회의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자명하다.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불안한 도시에서는 살아 갈 수 없다. 오염된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살 수도 없다. 인간성이 억압되고 전통이 단절된 황량한 도시에서 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웃이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도시에서 드러나는 왜곡된 삶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선진사회의 모습일 수는 없는 것이다.





#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이러한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날에 팽배했던

-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일체의 성장제일주의와 졸속주의를 배격한다.
- 인간성을 외면하는 일체의 물질주의와 배금만능주의를 배격한다.
- 전통과 문화를 단절하는 일체의 획일주의와 문화적 사대주의를 배격한다.
- 공동체의 조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배타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를 배격한다.

아울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살맛나는 21세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

-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 시민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
- 시민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든다.
- 시민이 중심이 되어 살 수 있는 인간주의적 도시를 만든다.
- 시민이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든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시민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를 창립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왜곡된 의식과 관행을 타파하고 참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로, 바람직한 도시사회의 건설을 위해 참신하고 선도적인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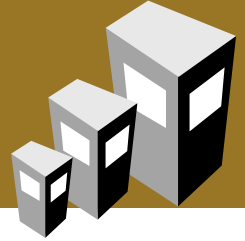
셋째로, 도시개혁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기존제도를 철폐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넷째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과의 공고한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도시개혁운동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우리가 펼치는 도시개혁 시민운동은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확신하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앞장서서 우리의 도시를 살맛 나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1997년 6월 28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백인길**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igbaek@daejin.ac.kr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서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주거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거정책에 있어서 9가지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가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이러한 주거권에 대한 법적 근거 하에서, 정부가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제도나 서비스가 충분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행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에는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서비스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권리로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은 매우 많다는 생각이다. 그중에서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보통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주택까지 포함하고 있어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과 더불어 여기에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도나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제시된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8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종류를 보면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입장에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든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 임대료, 임대기간은 상이하여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운영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 생성되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 정권의 업적은 아닐 텐데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했는가 보다는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했다는 포장에만 치우치고, 오히려 이것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더 혼선을 끼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공공임대주택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자가 정보를 찾아서 공고된 모집기간에 접수를 하고 탈락하면 또 다시 공고되기를 기다리며 접수를 준비해야 한다.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있는지, 어떤 지역에서 거주가능한지, 입주했을 경우 임대료 등 부담액은 얼마이며, 언제 입주가 가능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먼저 들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수요자가 가지게 될 일련의 공급증에 용이하게 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가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방식 등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의 근본이 될 수 있는 통계작성의 일관성, 구체성 및 정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2020년 임대주택 재고현황」 통계를 보면 지자체별 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사원임대, 기존주택등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50년임대주택과 사원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나타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는 민간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9년 임대주택 건설공급현황」 통계를 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건설(10년, 분납임대, 5년, 사원, 정비사업조합), 매입(미분양, 신축다세대, 재건축·재개발, 사원), 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장기전세로 구분된다. 그런데 「2019년 임대주택 재고현황」 통계에서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5년임대, 사원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행복주택으로 구분된다. 2019년 분류체계와 2020년 분류체계의 차이로 인해 통계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외에도 2019년을 기준으로 하는 임대주택 재고현황 통계와 임대주택 건설공급현황 통계를 연계시키기도 어려운 형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주택 재고현황」에서 10년임대의 경우 건설, 재건축·재개발 매입, 분납, 미분양 매입, 부도, 신축 다세대로 구분되어 있다. 「임대주택 건설공급현황」 통계의 공공[매입]에 제시된 공급량은 미분양, 신축다세대, 재건축·재개발, 사원으로 제시되어 있어 결국 「임대주택 재고현황」에서 10년임대의 하위 분류체계의 일부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하게는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관된 형태의 통계를 보이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9년 재고량은 전국적으로 209,290호이며, 2020년 재고량은 212,985호로 1년간 3,695호의 증가가 있었다. 그런데 2019년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은 5,710호이고 2020년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은 2,262호이다. 기준시점의 문제이거나, 공급량이 준공실적인지 계획실적인지 등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재고량과 공급량간의 일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임대주택관련 통계가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게 작성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



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진단은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세 번째는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주거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수반되어야 한다. 주거지원 필요계층 중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정책목표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목표,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정책목표 및 지원대상아동을 위한 정책목표가 동일할 수는 없다. 즉,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목적의 하위개념으로서 정책목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므로 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이야기할 때에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주택에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량이 저소득층의 주거수준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전혀 연관성이 없음에도 이를 연결시키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로 임대하는 주택과 임대한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발표한다. 이것 역시 임대한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은 주거지원 필요계층에게 공급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중산층의 주택구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새롭게 등장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하나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그것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묶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형으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입주자격, 임대료기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공급시에는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정, 수급자, 비주택거주자, 장애인 등을 구분하여 공급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분된 유형별 공급량이 통계로 집계되어 발표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병행하여 주거지원 필요계층별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설정이 용이한 통계자료의 작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네 번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0년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1,737,078호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20년 말 총 주택재고의 9.38%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영구 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수는 978,065호로 2020년 말 총 주택재고의 5.28%에 불과하다. 2020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20년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주거기능의 수행이 어려운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49만가구 정도이며, 2017년 국토교통부의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는 369,501가구가 주거기능 수행이 어려운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의 숫자만 비교하면 과거 몇 십년 동안 공급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절반 정도 물량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공급량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량(총 주택재고의 5.28%)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경상북도는 총 주택재고의 3.15%, 울산광역시 3.21%, 전라남도 3.53%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지자체별로 들여다보면 그 격차는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확충을 위한 노력은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대기자명부의 도입, 지자체 역할의 강화와 공급계획에의 적극적 참여,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성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개선되어야 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가 그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되짚어보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겠지만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명확한 공공임대주택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더 촘촘한 임대주택 정책을 펼쳐서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주거권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SPECIAL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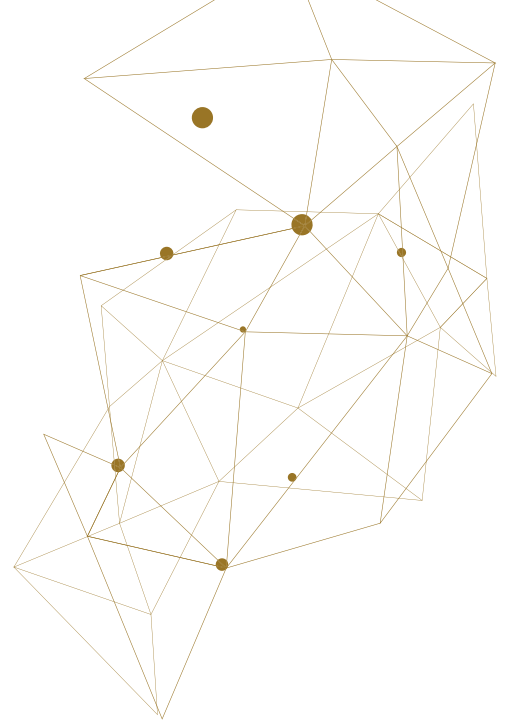
## 경실련 도시정책

- 층간소음 해결 위해 관련 법률 개정해야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 시민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 윤석열 정부 100일의 균형발전, 공약을 기반으로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 2022년 새 정부의 도시재생은?

# 층간소음 해결 위해 관련 법률 개정해야

박 영 민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ympark@kei.re.kr



## 1. 소음의 위해성 및 층간소음 법률개정의 필요성

유엔 환경계획(UNEP)은 최근 공개한 “2022 프런티어 보고서”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3대 환경요인으로 가장 먼저 소음문제를 지목하였다. 소음공해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는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수면장애, 심각한 심장질환과 당뇨병 등의 대사 장애, 청력 손상, 나아가 정신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져 도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기 때문이다. 2022 프런티어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소음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음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은 경증부터 일시적인 고통으로 발전하며, 최종적으로 만성적인 신체장애에 이르기까지 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환경소음에 의하여 2,200만 명이 만성적인 소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약 650만 명이 수명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환경소음에 대한 장기노출로 심장질환의 48,000개의 새로운 사례가 있고, 매년 12,000명의 조기사망을 유발한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도 교통소음에 노출되면 급성 심근경색과 심부전의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병 발생률이 8% 증가하고 고혈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국민건강 및 소음 데이터 분석에서도 주간 소음 노출이 1dB(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이 0.17~0.66% 증가한다고 조사되었다.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sup>1)</sup>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다. 경실련은 지난 6월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러한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1)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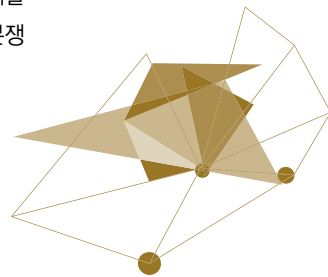
지난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고, 국토부가 8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듯하여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후확인제에서의 층간소음 검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2~5% 세대만을 측정하는 샘플링 테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95~98%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나마도 과거부터 시행해 오면서 문제가 많았던 사전인정제도로 계속 진행이 되어 층간소음 실측과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대정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동주택 95% 이상의 세대가 층간소음 실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일정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사용검사권자가 사업 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했으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이 소음기준을 초과했을 때 관련 법령(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동 시행령 등)에 벌칙 근거나 벌칙 규정이 없어서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즉, 공동주택의 건설사업 시행자나 건설업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바닥충격음) 기준을 지켜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자, 공동주택 층간소음(바닥충격음)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80% 이상은 지금과 같은 층간소음 분쟁 환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2. 층간소음 대책 마련 대정부 질의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국토교통부에 공개 질의하였다. ■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도입을 위해 전수조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 있는지? ■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하여 각 공동주택의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명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 중량충격음 측정방식을 뱅머신 방식과 임팩트볼 방식 모두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 시행령에 벌칙 규정을 신설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 있는지? ■ 층간소음 근본대책 중 하나로 기동식(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을 공공부문의 아파트부터 시공 의무화하고 민간으로도 확대 시공할 계획이 있는지?



### 3. 층간소음 법률개정 대국회 질의

아울러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를 법률개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개 질의하였다. ■ 층간소음 관련 법률에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도입을 위해 전수조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 5년 내 20%, 10년 내 50%, 그 다음 전수조사) ■ 모든 공동주거시설(2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주거형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의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층간소음관리를 위한 (가칭)“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을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하여 각 공동주택의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명시하는 (가칭)“층간소음표시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 중량충격음 측정 방식에서 뱅머신 방식 평가기준과 임팩트볼 방식 평가기준 모두를 만족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측정방식과 평가기준을 법률 및 별표로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시행령에 벌칙규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 건축방법을 벽식구조에서 기동식(라멘)구조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동식(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을 공공부문의 아파트부터 시공 의무화하고, 민간으로도 확대 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경실련은 폭력범죄, 강력사건으로 반복·표출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초과 시 벌칙 강화, 공공부문 공동주택 신축 시에 기동식(라멘)구조 시공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하여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명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도” 도입으로 공동주택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모든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을 후분양하여, 선분양으로 인한 층간소음 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선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 방안을 이웃간 분쟁 차원으로 접근해왔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고있는 수면방해를 우선 고려하여,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의성이 있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층간소음 발생 행위에 대해서는 권고기준보다는 강제력이 있는 처벌 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으로는 주택 품질 향상을 꾀해서 층간소음을 원천 차단하고, 모든 국민이 정당한 공동주택에서 주거해야 할 마땅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당장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 ■ 경제 · 사회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2022년은 국내외에서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이다. 우선 세계적으로 창궐하여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 기미로 돌아선 것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막혔던 사람들의 숨통이 조금 트이자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 결과 가뜩이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가 혼란한 상황에 기름을 부은 모양이 되고 말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3년은 올해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이러한 세계 경제의 격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내로 눈을 돌리면 가장 큰 이슈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일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기대를 받고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시작부터 대통령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예산 낭비의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현재 국내 이슈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가격의 폭락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의 긴박한 경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대처 능력 또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면, 올여름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초대형 태풍으로 인하여 반지하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서울의 도심부가 침수되었으며, 전국의 많은 산업시설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연재난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하며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안전관리 능력에 있어서 허점이 많이 노출되어 뭔가 부족한 인상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0월 29일 저녁 이태원에서 158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길에서 압사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책임 있는 윗사람들의 대응과 이에 대한 처벌 보다는 현장 실무자 위주의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모두가 예상은 했었지만,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 ■ 경제와 안전은 별개의 것이 아닌 양립해야 한다.

올 한해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역시 많은 사람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주제 가운데 하나다. 이 법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망자를 줄여보고자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1년 뒤인 올해 1월 27일 시행되었다. 아직 시행 첫해라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법적으로도 미흡한 점도 많이 발견되어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올 한해 재해 예방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 결론적으로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오히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별로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하지만 법시행 이전보다 늘어나는 느낌이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대상이 되는 재해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태원 참사 등 시민이 다수 사망하는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행의무의 부여나 특별한 조치행위에 있기보다는 강력한 처벌조항에 있다. 강력한 처벌에 기인한 이행의무의 강제력이 담보되어 재해 예방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은 안전보다는 경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경제와 안전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해야만 하는 것인데, 안전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어 경제규제의 하나로 단정해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8월에는 중앙부처 중심의 TF가 구성되었으나 검토 방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제활동에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적절한 검토 방향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면 재해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안전관련 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예방에 투자하지 않아서 취한 이득보다 훨씬 큰 손실을 보게 된다. 2023년에는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여 재해 발생으로 발생하는 국가 전체의 손실과 생산활동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전이 양립해야만 한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 ■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요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개정 발의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률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안으로 부처에서는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가 9월에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였으나 연말인 현재까지 개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연내에 개정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타 부처에서는 개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조차 없는 상황이다. 물론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2022년에 발생한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기업들의 관심이 중대산업재해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러다 보니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실하게 검토되고 있어서 우리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강화를 위해서라도 중대시민재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이뤄지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예방조치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민간부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은 매우 부실한 형편이다. 예를 들면, 중대산업재해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민재해의 경우 시민재해로 별도 구분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매몰되어 9명이 사망한 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건설현장과 주변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재해는 노동재해, 일반인의 재해는 공중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어느 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하는가를 기준으로 재해를 구분하기보다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시민이 왜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직접적으로는 법률에서 도로를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도로를 관리대상에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이태원 참사를 정말 막을 수 있었느냐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현재와 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대상과 관리 주체를 중심으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는 시설물 안전관리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즉,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철학을 재정립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현재는 관리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상태다.

아직 미완성의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실무적으로 안착하여 시민의 안전확보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재난이나 안전 관련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병행 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과 내용이 다듬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 진 광 성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  
thomasjin@koti.re.kr

## 서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에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을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중교통을 포함한 도시교통의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활동 중이다.

2022년도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 대한교통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28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LG 사이언스파크 6층 비전 홀에서 대한교통학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공동 주최로 시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공동세미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인 김근영 교수의 개회사/폐회사와 함께, 세 개의 주제 발제: 주제 하나 -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 주제 둘 - 시민이 바라보는 견고 싶은 도시: 기후 위기와 견고 싶은 도시, 주제 셋 - 친환경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현안 진단,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 본론

### 주제 1: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 발전방안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서 대중교통의 계획지표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의 정책변화 고찰, 기후 위기와 대중교통을 진단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의 정리, 대중교통 정책의 한계-억제·전환·대체 효과 부족, 교통수단 전환의 필요성: 전환과 대체, 교통수요관리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의 발전방안을 위한 여덟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광일 사무처장이 제안한 대중교통정책 발전방안으로는 1) 교통정책 우선순위 정립-지속가능교통체계 구축 필요, 2) 자동차 통행량 관리-초저배출구역(ULEZ) 운영과 혼잡통행료, 주차관리 정책 확대 시행, 3)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4) 대중교통 전용지구, 보행 전용 거리 확대 등

도로 공간 재편, 5)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확대, 6)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와 재정 확보, 대중교통 예산 집중 투자, 7) 지방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하면서,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정책의 효과는 연계교통과의 접근성 향상과 자동차 이용 관리가 함께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 주제 2: 시민이 바라보는 견고 싶은 도시-기후 위기와

### 견고 싶은 도시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 김은희 센터장)

김은희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보행저항의 역사-불평등에 대한 저항(보행권 선언(1992년), 생활도로 제안(1994년), 보행광장 만들기(1996년), 버스 공공성 강화(1996년), 자전거를 달리게 하자(1997년), 이동권 확보(2001년) 등), 보행 안전과 보행불편-보행권 약화, 주민들의 요청 SOS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교통 전문가들과 주차 문제, 생활도로-시설물/특별성, 보행과 자전거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보행으로 세계의 기후변화 동향과 보행의 중요성, 보행자의 주인 의식 강화, 세계의 보행권 강화 운동 사례(독일, 호주, 프랑스)를 보여주면서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보행운동의 필요성과 아름다운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협의와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주제 3: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현안 진단

### ((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영주 안전사업 본부장)

고영주 (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영주 안전사업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보행문화의 특성, 초등학교 안전교육 진단 설문 및 결과, 탄소중립시대의 자전거 교통수단의 필요성(국내외 사례), 자전거 환경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설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발표하였다.

### 종합토론

종합토론에서 교통 학계 전문가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김태완 교수는 1) 전체 개인 교통(승용차)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교통 수단간의 역할과 통행수단의 적절한 분담의 필요성과 효과를 통한 교통 수단간 조합, 2) 대중교통확산을 위한 인프라 시설의 확충, 3) 적절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교통환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교통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로 참석한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구자전거타기운동 녹색교통분과위원장 김종석 대표는 1) 길의 중심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녹색교통 필요성 교육을 통한 홍보의 필요성, 2) 도보/자전거 도로의 동시 이용의 혼재에서 자전거 도로 분리의 필요성, 3) 유럽 사례를 본보기로 한 도로 재분배의 중요성: 불편한 도로에서 편리한 도로의 변화, 4)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요금/복지 확대 정책으로 다양한 기간제 요금제 실시, 5) 개인 교통(PM)의 폐쇄성을 극복한 개방성의 확대, 6) 개인 교통 관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시행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오랫동안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현재 대한교통학회에서 활동 중인 장영수 부회장은 1) 공간의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동차의 중요성과 승용차의 중독성에서의 탈피의 필요성, 2) 공공재의 재분배 관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중요성, 3) 교통수요 관점에서의 편중된 교통수단에서 벗어나 타 교통수단과의 균형의 필요성과 주차관리, 4) 대도시간/도시·지역내/도시간 교통정책의 정교화, 5) PM의 역할과 신개념 도입의 중요성-MAAS, 6)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의 강화, 7) 오토바이 교통수단의 개념 재정립을 위한 시민운동 및 정책의 필요성-도덕성, 질서, 전기 오토바이의 도입 등, 8) 보행의 날 정립-소통/안전/환경 등을 토의하였다.

교통안전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참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은경 책임연구원은 1) 집중된 승용차 정책에서 탈피한 대중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시민단체의 역할, 2) 일정한 시설/수단/이용 확충에 집중된 세분화된 교통수단 활성화 정책으로의 변화를 통한 대중교통의 필요성 강화, 3) 생활권 도로의 자동차 진입 통제, 4)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사후 대책보다 예방대책의 강화 필요 등을 토의하였다.

교통정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참석한 한국교통연구원 김범일 책임전문원은 1) 대중교통의 편리성-정시성 강화/요금정책의 혁신, 2) 자율자동차의 공유화 정책으로의 활용 강화, 3) 교통수단간 각 수단별 특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고 다양하고 공공성이 강한 교통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 결론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토론회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가 2022년 추구하는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서 대한교통학회의 교통 전문가들과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토론하는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 윤석열 정부 100일의 균형발전, 공약을 기반으로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 황지옥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jhwang@jbnu.ac.kr

## ‘윤석열의 100일, 트럼프의 100일.. 답아도 너무 답았다.’

엿그제 한겨레 박찬수 기자가 쓴 ‘윤석열의 100일, 트럼프의 100일.. 답아도 너무 답았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글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첫 100일을 소환해 냈습니다. 루스벨트의 100일은 뉴딜 정책의 기초가 되는 73건의 법률을 통과시켰고, 실업자구제기구를 설립했고, 뉴딜의 상징과 같은 테네시강 개발사업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며 의문을 던집니다.

취임 이후 100일은 국민이 그 약속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실천될 지를 기다려준 시간

제가 느끼기에 국민의 힘에서 대선 공약은 왜 만들었던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당이 공약이란 것을 만드니까? 공약은 공적 약속입니다. 국민에게 "정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잘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내놓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 100일은 국민이 그 약속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실천될 지를 기다려준 시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8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취임 당시 내세운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퇴색을 넘어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핑계로 한 것인지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빌미는 다시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반도체를 앞세워 지역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모든 것에서 찬밥입니다.

## 지방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도체학과를 만들 기회조차 박탈

지방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도체학과를 만들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교육이란 것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지요? 지방도시의 생존을 평가할 지표와 같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방거점 대학이 있는 중규모 도시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고, 도시규모를 유지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학과 사태를 보면서 지방은 다시 위기의 시대에 빠져들었다고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 100일 균형발전은 빛좋은 개살구짜이 난 느낌입니다.

## 수도권 규제완화는 다시 가속도

반면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다시 가속도를 내려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느 기사에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국민주권 · 지방분권 ·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등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 수도권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지역은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관이 저와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집권하게 된 권력기관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합니다. 시장중심의 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르면 그게 맞다고 보기에 그런 것 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 주택건설과 관련해서도 270만호의 대부분을 수도권에

주택건설과 관련해서도 270만호의 대부분을 수도권에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 많이 지을 수 있지요, 또 이와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논리를 내세워 3기신도시 건설 등을 강행해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면 이제는 정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데 어느 곳에서도 이런 발상의 전환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 균형발전을 추구하며 지방에 직장을 창출해 내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을 확대해가는 균형발전 정책은 수립할 수 없었던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외쳤지만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체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얼마나

지방을 가보았는지 말입니다. 영남쪽만 거의 집중적으로 몇 차례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정책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난 정부의 사업이라고 '과감한 축소'를 공표한 지 오래 됐고, 지역은 이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되는 것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빛장 풀기'가 임기 초반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과 국내 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규제 개선 방안'은 정치적으로 보면 재빨리 그냥 아무 생각없이 후딱 해치워 표발 관리하는데는 최선일 것입니다. SOC 교통망 개선을 통해 게다가 수도권과 1일 생활권 거리가 된 춘천, 원주 그리고 천안 등으로 영향권의 인구도 혜택을 볼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이럴 수 없을 겁니다.

국토부장관이 우리나라의 국토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럴 수 없을 겁니다. 수도권 빛장 해제에 대한 반대급부 정책으로 지역에 대한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가 적지않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즉, 비수도권에 파격적인 제도적 장치와 혜택이 없는 이상, 기업은 제도권의 보호를 받는 규제완화 지역을 최적의 사업지로 선택할 것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반도체 공장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으며, 서로 선점하려고 경쟁하고 있지만 허망한 경쟁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은 아무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 '지방시대 위원회'가 내놓을 균형발전정책을 마지막으로 기다려 본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선명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런 기사를 별로 실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검토가 어렵습니다. 다만 내달 출범하는 '지방시대 위원회'가 내놓을 균형발전정책을 마지막으로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또 말만 성찬일지 아니면 정말 수도권 반도체를 능가하는 실현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말입니다.



# 2022년 새 정부의 도시재생은?

##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treejin11@wku.ac.kr

2022년 7월 27일은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이 공식적으로 보도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뉴딜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그동안의 재생사업이 가져온 효과와 성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권교체를 이룬 새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향방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 발표된 새로운 정부의 재생은 도시를 다시 살린다는 계획에 대한 가치를 상당 부분 변화시켰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시재생은 주로 주민참여를 통한 수복형의 정비 사업이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활력을 추구하였고 주로 공공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정부의 도시재생은 아직 개선 과정에 있으나 개량 및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추구하고 지역 공동체로부터의 활성화보다는 파급효과가 높은 경제적 성과를 담보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와 금융 투자를 이끌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마치 못한 자식을 여럿을 좀 부족하나마 모두가 조금씩 잘 살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 잘난 자식을 꼽아 집중 투자해서 가업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우리네 근대화 시기의 많은 가정에서 선택해야 했던 상황과 닮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영원히 얻지 못하겠지만 각각의 선택이 가진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 인지하고 한쪽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의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많은 형제를 골고루 지원하는 것은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정의롭게 보입니다. 이 선택은 풍요롭지는 않지만 모두를 최악의 가난에 이르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전반적인 가세(家勢)를 세우고 집안을 일으키는 일은 쉽지 않게 됩니다. 어느 한 자식을 선택하여 - 보통은 집안의 장자(長子)가 선택되는데- 집안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일은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옳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위 뽕뽕한 한 놈이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나마 형평성 있는 대안으로 만드는 일은 그 한 자식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다른 형제들을 성공한 이후에 돌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했던 부모가 그 성공한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성공한 하나의 자식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을 통해 선대의 가난이 여러 세대로 확대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은 형평성이라는 측면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형평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개성과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시민이 정책적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bottom-up 방식의 재생 접근법보다는 결과적으로 표준성, 고른 기회, 그리고 사실상 top-down 방식을 가진 bottom-up 사업 구조가 횡행했고 전 국토의 도시재생사업이 유사한 사업내용을 가지게 되어 결국, 지역의 정체성도, 눈에 띄는 사업성도, 그렇게 강조하던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형평성 측면에서의 공동체의 지원이 몇 사람의 주민과 소규모 그룹에게만 돌아갔다는 한계도 피하기 어려운 지적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은 지나치게 선택과 집중, 효율에 치중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마치 그동안 정의감에 불타는 부모를 만나 제 것이라 생각해 온 것들을 나눠 가져온 장자(長子)가 그간의 서러움을 토하듯이 본인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표된 새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 자료를 살펴보면, 투자와 수익이 담보되는 경제적 거점 공간을 개발하고 거점 시설을 조성하며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을 어떻게 공공과 함께 행동하는 주체로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을 위한 도시 개발의 형평적 가치와 부의 분배보다는 소위 도시브랜딩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지역이 새로운 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위상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개발 가치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동안 지역의 재생이라는 가치가 지키고자 하였던 지역민 중심의 형평성과 균형적 발전은 와해되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보다는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 중심의 소득 창출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민간 기업의 공적 역할이라는 딜레마적인 가치관의 대등하지 않은 도시 간의 대등한 경쟁을 방치하는 방관자적인 재생을 만들지는 않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한 논의는 다루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희생을 감내한 나머지 형제들과 그 성공의 결실을 어떻게 나누고 공유하고 상생의 밑거름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도시 개발의 추세가 재생에서 회복탄력도시로, 그리고 도시관리로 확장되고 있음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응하듯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의 내용도 일부 도시관리적 개념을 담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민관협력형 리츠, 민간제한형 리츠, 사업기획부터 시공, 운영 전반을 주관하는 민간의 역할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의 전략들은 도시관리에서 흔히 발견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롯데몰 힐즈와 같은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일본 모리부동산처럼 도시의 개발에서 기획부터 사업 종료 이후의 관리 운영에 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된 관리 프로세스를 만든 사업 시행 변화는 새로운 도시 개발의 모델이 되는 듯 보이고 이 방식을 통해 민간과 공공 모두에게 도시가 다시금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란 것을 광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진 모델로 삼아 학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에(家)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한 마치츠클리(まちづくり) 모델이 상반되는 역사문화적 속성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기 힘들었듯이, 비판과 필터링 없이 소개되는 선진의 사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또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잘못 이용될 경우, 큰 민간기업 우선이자 독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타운매니지먼트는 반드시 성과의 분배와 공유, 연계에 대한 준비와 실행전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파트너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정책적 방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은 유효한 하나의 수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칫 중소기업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하고 도시에서의 인간성 결여가 만연하고 부와 성과의 소수 집단에 집중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짐과 동시에 균형적 발전의 추가 크게 기울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대도시를 제외한 국가 전반의 지역적 활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살고 있고 지역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이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그동안의 도시재생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매우 멀어졌습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은 지원의 대상이지 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민주적 가치를 최상으로 여기는 민주국가에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소속자로서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고 도시 관리의 하나의 주체로서 기획부터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여 공공과 민간기업, 주민의 총체적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민이 깨닫고 성장하고 도시의 소득과 성과를 함께 나누면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 관리적 재생을 개발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 미래도시(스마트시티)의 전제조건(도시숲 조성)
- 부산경실련 - 아파트 중심의 (구)한국유리부지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 미래도시(스마트시티)의 전제조건(도시숲 조성)

## 최 광 결

도시개혁센터 숲분과 정책위원  
rhkdrjf@naver.com

## 사막에 친환경 미래도시를 짓다. 네옴시티

2022년 11월 사우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NEOM)”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 방문전부터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며 각종언론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네옴시티에 관심을 가지며 보도하고 있다. “네옴시티”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석유 중심의 사우디 경제를 대전환하기 위하여 2017년에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다. “네옴시티”는 태양광·풍력발전·그린수소 등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를 갖추고,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온화한 기후와 재해예방, 사막위의 푸른 나무들, 세계 최고층 빌딩, 로봇의 실용화, 학교와 직장의 5분거리 이내의 직주 근접 등 컴팩트시티와 스마트시티의 복합체로 형성되는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된다.

사우디 북서부 일대에 약 2만 6500km<sup>2</sup>로 조성되는 “네옴시티”는 자급자족형 직선도시인 ‘더 라인(미러시티)’과 첨단 산업중심도시 ‘옥사곤’, 친환경 관광도시 ‘트로제나’의 주요사업과 유전자변형작물(GMC) 경작지, 항만(네옴베이), 국제공항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30년까지 네옴시티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컴팩트한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스마트 기능을 도입한 미래도시인 “네옴시티”의 주요키워드에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에 대한 키워드가 나열되어 있다. 이는 사막위에 심어진 푸른나무들과 초록숲으로 변화된 미래도시의 다양한 계획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대한경제 : 600조 네옴시티 (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

## 미래도시(스마트도시)와 도시숲 조성

최근 “네옴시티”는 국립식생보호 및 사막화방지센터와 협력해 최소 150만 헥타르의 토지를 복구하는 녹화 프로젝트(NEOM Regreening Initiative)를 시작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네옴의 녹화프로젝트는 황폐화된 토지의 복원과 야생 동물 서식지의 복구를 위해 2030년까지 1억 그루의 토종 나무 및 관목, 초본을 식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화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은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 서식지의 공존을 보장하는 것”을 필수 비전으로 네옴의 녹화프로젝트를 시작하므로써 사막화를 방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연환경 중 하나를 조성하고 보존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스마트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파리의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생태적 도시전환 정책으로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파리” 계획을 발표했다. “15분 도시 파리”는 코로나 19(Covid-19)이후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생태적, 친환경적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활반경을 15분 거리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를 개혁하겠다는 계획으로 2024년까지 대기오염과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의 2개 차로를 폐쇄하고 녹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녹지와 자전거 도로를 위해 2030년까지 더 많은 도로 공간을 폐쇄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보완해 더 푸르고, 더 깨끗하고, 더 쉽게 건설 수 있는 도로와 교차로를 만들어 도심지에서 녹색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지를 도로망에서 확보하여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숲의 확대를 실현 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출처 :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제32호

## 제2의 경의선, 경춘선 숲길을 꿈꾸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공급 중심의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표한 3기 신도시에는 주택공급과 더불어 일자리, 교통, 친환경, 복합용도개발 등의 특징을 지닌 자족성 있는 신도시로 개발중에 있으며, 도시숲의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의 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보하고 저영향 개발기법(LID)을 적용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컨셉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철도 지하화 상부부지 및 폐선부지에 숲길을 조성한 경의선 숲길과 경춘선 숲길의 경우에도 도심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숲을 조성한 프로젝트 사업이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경의선, 경춘선 숲길)

현재 서울 내 지상철도(국철, 도시철도 포함)의 연장은 총 101.2km, 차량기지 면적은 4.6km<sup>2</sup>에 달하고 있다. 도심 내 철도시설은 도시공간을 단절하고 있으며, 소음, 진동 등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는 철도시설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의 조성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시숲 조성을 위한 공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의 스마트하고 컴팩트한 개발과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도시의 기본방향은 공간구조상 복합용도개발인 컴팩트시티와 기능상의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으나, 도시의 개발 및 관리, 정비의 기본방향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변화해야 한다. 철도시설 지하화와 폐선부지에 조성된 경의선과 경춘선의 숲길은 축구장 22개 규모의 녹지를 확충했으며, 생물종 다양성을 높이며 생태계 복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의선숲길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발견됐고, 경춘선숲길에선 서울시 보호종인 쇠딱다구리, 피꼬리, 박새가 서식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경의·경춘선숲길 사업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 도시 숲이 도시 생태계 복원, 건전한 도시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움시티”, 프랑스의 “15분 도시 파리”, 우리나라의 “3기신도시”와 “경의·경춘선 숲길”의 다양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노력들... 오늘도 나는 단풍으로 얼룩진 경의선 숲길을 거닐며 보행으로 지역명소를 연결하며, 지역주민들이 산책하고, 다양한 문화공연이 있는 제2의 경의선, 경춘선 숲길을 꿈꾼다.

# 아파트 중심의 (구)한국유리부지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ccejps@naver.com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는 해운대구 재송동 (구)한진CY 부지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공공기여협 상제를 거쳐 개발이 추진되는 곳이다. 해당부지는 2013년 6월 한국유리공업(주) 부산공장이 가동 중단 된 후 2018년 건축물이 철거되고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되다가 올해 2월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로 최 종 선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5차례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하였고, 3월과 8월 두 차례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올라왔지만 모두 보류되었다.

지난 8월 부산시의회 보고된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은 다음 과 같다.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합 계	주거용지	해양문화 관광시설	문화시설	도 로	공 원
면적(m <sup>2</sup> )	145,584	70,355	26,973	10,705	9,424	28,127
구성비(%)	100.0	48.3	18.5	7.4	6.5	19.3

## ※ 건축계획

구 분	부지면적 (m <sup>2</sup> )	규 모	비고
주거용지 (공동주택)	70,355	지하3층/지상40층~48층, 아파트 8개동 건폐율:60%이하, 용적률:400%이하	공동주택 2,086세대
해양문화 관광용지	숙박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3층/지상38층~48층 2개동 건폐율:60%이하, 용적률:400%이하	숙박시설 570 호실
		지하3층/지상4층 1개동 건폐율:60%이하, 용적률:400%이하	
	문화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0,705	사업완료전까지 도입시설 결정 예정

아파트 중심의 (구)한국유리부지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민간사업자 (주)동일스위트 측은 지하3층, 지상40~48층 규모로 총 2,086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건축을 기본 골자로 하여 숙박시설, 해양문화관광시설, 문화시설, 공원 및 도로 등의 개발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반공업(91.0%), 제2종일반주거(0.3%), 보전녹지·자연녹지지역(8.7%)으로 구성된 부지를 준주거(91.2%) 및 제2종일반주거(0.1%), 보전녹지·자연녹지지역(8.7%)로 용도변경 요청하는 것이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전체 부지면적 대비 주거용지는 48.3%(70,355㎡), 해양문화관광시설은 18.5%(26,973㎡), 문화시설 7.4%(10,705㎡), 도로 6.5%(9,424㎡), 공원 19.3%(28,127㎡)이다. 공동주택은 지상 40층에서 48층 아파트가 8개동 2086세대, 숙박시설은 38층에서 48층 2개동 570호실이 들어서게 된다. 부산시에 문의한 결과 숙박시설은 관광숙박 시설이 아닌 일반숙박 형태라고 하면서 이는 레지던스 형태도 있으나 개인에게 분양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한국유리 부지에 세워지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아파트)과 숙박시설이 전체(108,033㎡)의 최소 80% 이상 차지하게 된다.

현재 부산시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에는 (구)한국유리 부지는 해양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어 용도변경시 동부산 발전 전략상 해양관광과 관련된 개발로 하계끔 되어있다. 그렇지만 현재 협상안을 보면 공동주택(아파트)이 전체 부지의 48.3%를 차지하고 있고, 해양문화관광시설 대부분 면적이 숙박 시설로 되어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던 이곳에 해양관광분야의 개발이 아닌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일광 신도시와 일광역 동쪽 구도심과의 연계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일광 전체 도시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의문스럽다.

##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시의회 보고에서 부산시는 공공기여가 추가 공공기여 포함하여 총 2,4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알려진 바로는 공공기여가 600억원이 감소한 1,8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애초 추가 공공기여라고 밝힌 구역 내 도로와 일광로 확장 부분이 제외된 것이다. 구역 내 도로 건설은 민간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함에도 이것이 공공기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공공기여에 도로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과대포장 된 것이다. 거품이 빠진 것이다.



## 무분별한 용도지역 변경도 문제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다른 지역의 경우 도심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내 주거개발에 대한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도심에서 공업지역이 사라진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일자리를 걱정하면서 한편으론 공업지역을 무분별하게 아파트 단지로 용도 변경 해 개발하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공공기여협상제는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근거한 개발이 추진되어야지 지금처럼 사업자가 주도한다면 주거시설 개발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 제도가 토지가치상승분 100%에 초고층 아파트(난개발) 건설을 허용하는 꼴로 전략 되는 것이다. 공공기여협상제가 아파트 허가제라 되지 않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그렇지만 이번 (구)한국유리 부지 사업은 결국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지난 11월 16일 부산시의회가 공공기여금 1,800억원과 개발계획안에 대해 최종 동의를 한 것이다.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 통과는 시의회가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다. 부산시의회는 존재가 무색해지는 결정이다.

아름다운 바닷가 해양 경관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중심의 개발계획은 부산을 또다시 난개발 도시로 전락시킬 뿐이다. 바다 경관이 몇몇 입주민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민간사업자의 이익 창출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구)한국유리부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한국유리부지 사업이 도시기본계획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지역으로서 기능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다. 부산시는 (구)한국유리부지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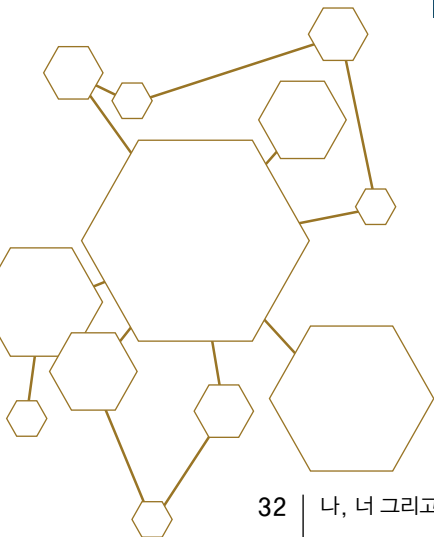
지역의 도시 이슈  
부산경실련



(구)한국유리 부지 (출처: 부산시의회 홈페이지)



(구)한국유리 국제공모 조감도 (출처: 부산시의회 홈페이지)



# 칼럼

- 도시개혁센터 6대 이사장 - 황희연 교수 인터뷰
- 판교신도시 성공인가? 실패인가?
- 과밀도시의 통근자



#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도시개혁센터 되길”

‘단편적인 운동에서 벗어나 시민 속, 현장 속으로’

– 도시개혁센터 6대 도시대학장 황희연 교수 인터뷰 –

정리: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dongi78@ccej.or.kr



지난 11월 17일 청주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에서 도시개혁센터 6대 이사장을 역임하신 황희연 교수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연구원 주변 아름다운 풍경과 가을 햇살이 어우러진 아주 멋진 날이었지요.

도시개혁 재발간 이후 고문으로 계시는 역대 임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어른들 말씀을 들으며 도시개혁센터가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곳이 도시개혁센터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도시개혁센터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었다는 이야기 들으며 자긍심과 벅찬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경실련이 넘어서야 할 과제들도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주셔서 묵직한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도시개혁센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어갈지, 우리는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떤 새로운 자긍심을 전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꿈꾸고 고민하며 힘차게 또 진중하게 새해에도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 환경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시민운동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의 환경파괴 문제나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으로 가는 교통정책 등에 문제의식을 갖게 됐죠. 거기다 '90년대 중반 대대적인 강남 재건축 발표가 있었는데, 멀쩡한 아파트를 다 부수고 잠실 이런 데다 고밀도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이 큰 충격이었어요. 건축 폐기물 문제, 자원손실 문제, 환경파괴 문제,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고밀개발이 가져오는 폐해,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문제 등 굉장히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었지요. 그런 상태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합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 나도 참여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권용우 교수님, 최병선 교수님 등 선배 교수님들께서 제안해주셔서 경실련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도시개혁센터가 불쏘시개 역할

내 기억으로는 '96년도 센터창립 준비모임에 처음 참여해 같이 준비해서 '97년도에 도시개혁센터를 발족했어요. 그 당시 강남 재건축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거 같아요. 기자회견도 많이 했었어요. 용인 서북부 지역이 엄청나게 난개발 되면서 사회문제가 됐을 때도 우리가 앞장섰었어요. 난개발 문제는 당시 보수언론도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시리즈로 전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우리 도시개혁센터가 수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 취임하고 나서 얼마 후였는데 국토 난개발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 되니까 대통령이 국토이용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특별지시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일종의 준비단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연락이 와서 나도 참여했지요.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현행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을 만든 거예요. 꼭 우리 활동이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우리 도시개혁센터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 그린벨트 해제 반대운동

김대중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선포함에 따라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나는 일종의 시민단체 대표 중 한사람으로 반대운동에 참여했어요. 경실련에서 환경정의를 만들어서 독립한 서왕진 사무처장과 나하고 둘이서 시민단체 대표하여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몇 차례 공방을 벌이기도 했어요. 국토부는 해제를 하더라도 다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우리 법이 너무 완화된 채 현재 보존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난개발을 막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환기시켜줬었지요. 지금 당장 현장을 가보자고 싸우고 그랬어요. 결국 소위 절충안 비슷하게 결정된 것 같은데, 좋게 말하면 반쯤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면 많이 아쉽고 허무해요.

# 소외계층,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도시개혁센터 되길

그 당시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었어요. 해제하고 다시 도시계획하려면 광역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한 것이지요.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만들고 나서 도시계획을 하면 몇 년 걸리니까 그렇게 좀 지연시켜보려는, 반쯤은 전략적이고 반쯤은 실제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국토부가 급하니까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일사천리로 진행하더라고요. 또 환경성 평가를 하라고 요구했더니 그것도 바로 진행했어요. “1-2등급지는 보전, 4-5등급지는 도시적 용도로 사용하고, 3등급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 일부 도시적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실제 많이 지켜졌었어요. 노무현 정부까지는 기본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졌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농업적성도 지표를 바꾸어 1-2등급지의 상당 부분을 해제 대상으로 넣어서 보금자리 주택 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제해 버렸어요. 몇 해 전 부동산투기 건으로 크게 사회문제가 되었던 광명신도시 건설 지역도 원래 환경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1-2등급지가 대부분이어요.

## 도시재생의 출발지는 도시개혁센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국토교통부가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R&D를 시작하는데, 실제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은 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위원회예요. 지금도 ‘도시재생 회고와 전망’을 강의할 때 이 얘기를 꼭 하죠. 누구나 공감해요. 우리가 처음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었고 내가 초대위원장하면서 책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으로 꽃을 피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출발지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라고 봐야죠.

도시재생을 집중적으로 십여 년 연구하고 실행해보니까 기존 정비사업과 적절한 타협점 모색이 필요한 것을 느껴요. 보존이나 개발이냐는 극단적 선택이 아닌, 가능한 살릴 것은 살리면서 리모델링할 것은 리모델링하고 필요하면 건축물 신축도 허용하는 거죠. 대개 일본이나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워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택도 공급해야 되고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기존의 시설을 모두 다 보존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던 말이죠.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시 중심부 쪽에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해요. 나아가서 도시산업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도시재생이 지속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늘어나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줄어든단 말이지요. 최근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도시재생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국가적 관심이 앞으로 더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도시재생 운동하는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 경실련, 단편적 운동에서 벗어나야

주택문제 접근형태에 대한 나의 생각이 꼭 옳다고는 못 하겠지만, 시민단체는 저소득자나 사회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경실련이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반값아파트 이런 것으로 소위 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주택가격을 낮췄는가? 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강남의 아파트는 아예 서민들, 일반 저소득자들은 접근도 못하고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의 게임이예요. 평당 3천만 원 하는 것을 분양가상한제로 평당 2천만 원으로 낮췄다고 합시다. 처음 분양을 받는 순간 분양가는 시기에 맞춰 올라가 버려요. 결국 차익은 초기 분양자에게 불로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로또라고 하죠.

분양가상한제를 주장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시장가격 3천만 원 하는 것을 2천만 원으로 낮췄다면 그 갭의 일정부분을 환수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지 하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보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되는데, 그냥 분양가상한제만 주장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운동은 아니라고 봐요. 시장에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소득층, 철저히 소외된 계층에 집중하고, 시장을 통제하는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을 주장할 때는 항상 그것을 서민주택으로 연동시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의미가 있어요. 현재 경실련 활동에는 그런 것이 안 보여서 솔직히 동의하기 어려워요. 반값아파트도 만들 수 있어요. 특별한 조건 하에서 만들 수 있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모델을 몇 군데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소업에 시민운동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되지요.

## 도시개혁센터가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시장논리로 가게 되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 중심의 도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럴 때 소외계층들, 시장에 적응 못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을 특히 우리 도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죠. 목표가 시장경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돼야 해요. 시장경제에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가만둬도 잘해요. 예를 들어, 주택이 꼭 필요한데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이나 시민단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시개혁센터 활동이 한창 활발할 당시에는 그냥 문제제기만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지요. 용적률을 얼마로 낮춰라, 사람중심으로 이렇게 바꿔라, 이것은 보존해라 등 항상 대안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국토교통부 자문을 활발하게 할 때 국장 중 한 분이 다른 단체들과 달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만 항상 대안을 같이 제시하니까 자기들의 정책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 한명을 경실련에 추천해달라고 하더군요. 위원추천 의뢰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다른 시민단체들과 차별화하여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시민운동의 전통을 잘 살려나가길 바랍니다. 최근에 반값아파트니, 원가공개니 이런 것들은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로 느껴져요. 항상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해요. 이 문제를 제기하면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지 그 파급효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등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운동을 하라는 당부를 꼭 하고 싶네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운동이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시킬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서 이해당사자나 주민들, 시민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도시개혁센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환경 도시로 알려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보봉이라는 주거단지가 있는데, 시민들이 '포럼 보봉' 이란 걸 만들었어요. 꼭 도시개혁센터 같은 구성 멤버들이 참여하여 만든 기구예요. 교수, 변호사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단체가 보봉단지를 생태단지로 건설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결국 국 의회를 통해 정책파트너로 인정받았고 나중에 입주예정자들까지 참여시켜가면서 세계적인 생태 단지를 하나 만들어내요. 우리가 똑같이 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 현장의 사람들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운동에 참여시키는 등 현장을 파고드는 그런 운동으로 가야 보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앞날이 새롭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 황희연 교수 주요 경력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6대(2011년) 이사장 역임
  - 1981~2017 :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2008~2010 :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20대 회장
  - 2015~2019 : 세종시 총괄계획가
  - 2018~2019 : 행정중심복합도시 8기 총괄계획가
  - 2019~2021 : LH 토지주택연구원 4대 원장
  - 2017~현재 :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 2022~현재 :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과정 객원교수



# 판교신도시

## 성공인가? 실패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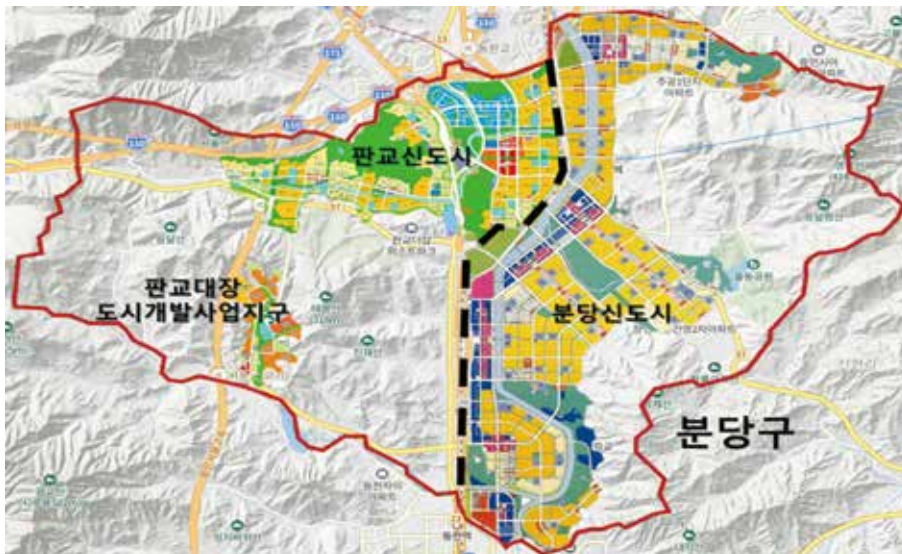
김근영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gykimusc@empal.com

### 수도권의 배꼽

판교는 수도권 배꼽이다. 수도권의 경기도는 왼쪽을 한입 베어 문 도넛 형태처럼 생겼다. 도넛 안쪽의 서울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남쪽에 판교신도시가 있다. 서울과는 경부고속도로와 신분당선을 통해 바로 연결되어 천혜의 도시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다. 뛰어난 명당인 이 지역에 21세기가 되기 전까지 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1970년대 중반에 그 땅에 대한 건축행위를 전면금지했다. 그리고 30여년이 지나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땅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개발된다.

판교는 광주산맥 줄기의 높이 542m 검단산과 618m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조성된 3만 세대, 8만8천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다. 행정적으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판교동, 운중동, 백현동, 삼평동, 하산운동, 석운동, 대장동을 포함한다. 2003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년 동안 면적 약 9백만㎡의 토지 위에 조성되었다. 탄천과 접하고 있으며 운중천이 중심부를 서에서 동으로 휘감으면서 지난다. 판교 동측의 연접지역에는 오십만 여명이 거주하는 2천만㎡ 면적의 분당신도시가 있다. 판교신도시 좌측 아래에는 요즘 정가에서 핫 이슈로 대두된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판교와 분당, 대장지구를 포함한 분당구청(『판교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다』 p. 234에서 인용)

# 판교신도시

## 성공인가? 실패인가?

### 아무도 몰랐다

판교는 교통이 사통팔달이다.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판교의 중앙부를 관통한다. 도시 경계에는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가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도시들로 바로 연결된다. 중심지에 있는 신분당선 판교역을 통해 신분당선으로 연결된 수도권 남부와 경강선으로 연결된 수도권 동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가히 신도시가 들어설 천혜의 명당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이 땅에 주거기능 위주의 전원형 저밀도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최초계획은 경제여건과 주택수요 변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계속 변경되었다. 개발목표도 처음에는 난개발 방지였다가 과밀억제로, 집값 안정으로, 무주택자 주거안정으로, 환경보호로 수시로 바뀌었다. 당·정·청의 기류가 바뀔 때마다 판교의 개발목표가 흔들리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내뿜개쳐졌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역점을 두었지만 경기도는 첨단 일자리 창출을 중시했다. 그래서 제1 판교 테크노밸리의 면적으로 정부는 10만평을, 경기도는 100만평을 주장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참여하게 대립하자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20만평으로 결정했다.

참여정부의 후반기인 2006년 판교신도시 주택청약이 시작되었다. 배후에 분당과 영통, 광교, 동탄, 오산 신도시를 보유한 판교는 '로또 판교'로 불렸다. 언론과 부동산업계의 바람잡이로 청약 광풍이 불었다. 중소형 아파트 경쟁률은 평균 50대1이었고, 최고는 2,073대1을 기록했다. 중대형의 최고 경쟁률은 869대1이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필지도 2011년까지 모두 매각되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개발이만 보아도 LH공사가 총투자금액의 26.8%인 약 2천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는 50.3%인 약 9.3천억원으로 산정된다. 입주기업들의 총수익은 현재 6.4조원으로 추정된다. 부지 매입가의 약 5.6배에 달한다.

판교를 성공한 신도시라고 말한다.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입주자, 참여한 LH와 GH공사, 입주기업, 세수가 증가한 정부와 지자체, 건설·부동산업계 모두 이익을 보았다. 그러면 성공한 것인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익과 정치적인 이해득실만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아닐까?

### 숨은 그림 찾기

판교신도시에는 세 개의 테크노밸리(TV)가 있다. 북쪽에 있는 제1 판교TV와 북서쪽의 제2·3 판교TV를 합한 면적은 116만㎡다. 아직 계획단계인 제3 판교TV를 제외한 1·2 판교TV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7천개의 IT(정보통신), BT(바이오), CT(문화콘텐츠), NT(나노)기업에서 7.2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2030세대가 ⅓를 차지한다. 판교기업들은 110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해 우리나라 총 GDP의 5.3퍼센트를 점유했다.

1995년 지구촌 최초의 '도시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 인 「뉴욕 실리콘 앨리Silicon Alley」를 품은 테크시티 3.0 뉴욕이 탄생했다. '도시혁신지구'와 테크시티 3.0은 스마트, 바이오, 그린 등 다양한 형태의 4차 산업혁명 아이디어들을 테크 자이언트와 유니콘 기업으로 변신시키는 곳이다. 2022년 현재 전 세계에는 116개 대도시권에 172개의 도시혁신지구가 있다. 첨단 일자리를 원하는 2030세대들의 꿈을 실현하는 신개념 일터다. 우리가 1.7천개 기업과 7.2만명의 일자리를 성공이라고 자축하고 있을 때 1·2·3 판교TV보다 9배나 큰 뉴욕의 테크지구는 4.4만개 기업과 74.4만명의 첨단 일자리를 창출했다. 판교보다 18배가 큰 보스턴의 테크지구도 5.5천개 기업과 17.6만명의 일자리를 자랑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2030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고민이 많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2013년 이후 감소추세다. 세계경제와 산업이 1981~2010년 MZ세대가 여는 MZ경제로 전환되면서 도시혁신지구를 보유한 테크시티 3.0 도시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에 익숙하며 교육수준이 높고, 참여에 능해 공정에 민감한 MZ세대의 역량을 발휘할 테크시티 3.0의 육성이 선진국들의 화두다.

## 오시리스의 저울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망자는 자칼의 머리를 한 '저승사자' 아누비스에 이끌려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오시리스 신 앞에 선다. 오시리스는 저울 왼쪽에 망자의 심장을, 오른쪽에 깃털을 올린다. 심장에는 망자의 선하고 악했던 모든 생각과 행적이 담겨 있다. 저울추가 심장으로 기울면 망자는 괴물 아무트에게 잡아먹힌다.

어제의 신중하지 못했던 결정이 오늘과 내일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 뒤틀려진 인생을 제자리로 돌리려면 더 큰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꾸기 어려운 도시계획도 그렇다. 판교가 '심판의 저울'에 놓인다면 우리는 '깃털보다 가벼울 정도로 사심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변론할 수 있을까? 후손들은 판교를 시대의 맥을 짚은 자랑스러운 신도시로 역사에 기록할 수 있을까?

### 〈참고문헌〉

김근영, 2022, 『판교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다』, 이담박스.

박정호, 2016, "오시리스의 저울", 중앙일보 2016년 12월 22일자 기사

	<b>판교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다, MZ경제를 주도하는 테크시티 3.0 판교</b>	
	저 자 : 김근영 출판일 : 2022.11.18	출판사 : 이담박스 쪽 수 : 367
<p>테크시티 3.0 판교의 구상부터 개발까지를 다룬 도서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테크노파크, 첨단산업단지, 3기 신도시 자족용지로 연결되는 우리나라 산업발달사를 테크시티 발전의 시각에서 조망했다. 테크시티 3.0 판교와 비교해 경공업도시를 테크시티 1.0으로, 중화학공업도시를 1.5로, 실리콘밸리를 2.0/2.5로 구분했다. 다가오는 경제위기 이후를 바라보며 MZ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촌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테크시티 3.0의 중요성을 설명한다.</p>		

# 과밀도시의 통근자

백남철

도시계획센터 교통분과 정책위원  
nc100@kict.re.kr



그는 서울 집값에 떠밀려 1호선 교외에 있는 집을 샀다. '그 순간 기쁨'은 통근의 고통을 감내하고 남으리라 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교외 전철역으로 가는 마을버스 역을 향해 달린다. 마을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앱을 열어 보고 "다음 기차는 2분 후 도착"을 확인한다.

그는 마을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졸달음질, 1호선 용산행 급행열차를 겨우 탄다. 그는 열차에서 앉을 자리를 찾는다. 앞자리 사람의 그 어디도 쳐다보지 않는다. 서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통근열차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과 눈인사도 하지 않는다. 사람 대신 스마트폰을 본다.

그의 객차 안은 3~4개 역만 지나치면 20~30cm앞도 보기 어려워진다. 이때쯤 창문 밖을 보면 부평역을 지나고 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군중 속의 얼굴들. 아예 눈은 감고 있고, 입에는 마스크까지 숨쉬기도 곤란해 보인다.

그도 '혼수상태' 인 양 꼼짝 않고 있기로 한다. 새로운 역에 도착할 때마다, 객차 문이 열리고, 러시아워의 통근자들이 밀치고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그때쯤 열차방송이 흘러나온다. "다음 역은 신도림역입니다. 환승 대기 때문에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속 운행합니다"

그는 서서히 혼수상태에서 깨어난다. 지각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의 앞에 떠오르는 회사 동료, 거래업체의 사장님과의 시간약속 연결 하나하나가 틀어지기 시작한다.

다시 열차가 움직여 신도림역 급행열차 승강장에 도착한다. 2호선으로 갈아타는 군중 속에 합류. 그러나, 계단부터 줄을 서 있다. 마음부터 포기한다.

그는 이번 열차를 갈아 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사람에 떠밀려 회사에 지각하고, 인생에 지각하고 만다. 이제 그는 서두르지 못한다.

(붙임)

신도림역 1일 환승인원 약 50만명 \* 1인당 1일 왕복 약 3시간의 통근. 신도림역 환승 통근자 1일 153만 시간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한 채, 메가시티 수도권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빨리빨리"는 한국경제성장의 상징이었고 동력이었다. 그러나, 과밀도시에서 "빨리빨리"는 시스템적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 도시 개혁 센터 이야기

-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 회원명단



>>> [도시개혁 책자] 2022년 여름호/재발간 2호  
: 발송 완료 (7/15)



도시개혁 재창간 2호 (표지)



도시개혁 재창간 2호 (목차)

>>> [성명] 사후확인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못해 (8/4)

-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됨.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후확인제도가 층간소음의 해결책인 듯 기대감을 보이지만 경실련은 사후확인제도 수준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함. 더군다나 사후확인제도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으로 지금 당장 준공되는 공동주택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님. 실제 시행은 빨라야 3~5년 후에야 가능함
-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 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일부만 조사하는 방식은 매우 허술한 대책이고, 기준 초과시 조치도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라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함





## 》》 [해피빈] 국민 스트레스 증간소음,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 기간 : 7월 27일 ~ 10월 25일까지

- 모금액 : 657,100원 / 기부자: 386명



## 》》 [성명]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8/10)

- 이번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거민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상도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반지하 주거민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가 주거 취약성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임
-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을 규탄하며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서민주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우선 노후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비주거용도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 [온라인 북토크]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

- 일시 : 9월 7일(수) 오후 3시~4시 30분,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초대 손님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아파트 민주주의 저자)
  - 앵커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 이벤트 : 생중계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명 선정해 '아파트 민주주의' 책 증정



온라인 북토크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

## 》》 [토론회] 시민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 일시, 장소 : 9월 28일(수) 11:30~13:30, LG사이언스 파크 6층 비전홀
- 주최 : 대한교통학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순서
  - 사회 : 진광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개회사/폐회사 : 김근영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강남대 교수)
  - 발제1 :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발제2 : 시민이 바라보는 걷고 싶은 도시-기후 위기와 걷고 싶은 도시(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발제3 :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현안 진단(고영주(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 본부장)
  - 종합토론 : 김태원(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종석(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회장), 장영수(대한교통학회 부회장), 조은경(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 정책위원/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김범일(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



“시민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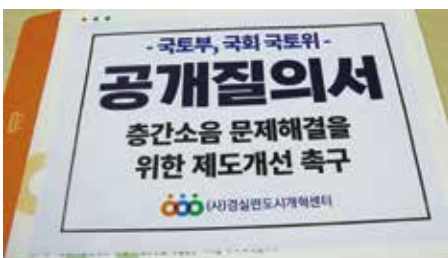


## 》》 [국감질의] 국토부 국정감사 총간소음 관련 질의 (10/6)

-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실련이 제출한 내용으로 총간소음 문제에 대해 질의함

## 》》 [공개질의] 총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국토부 및 국토위 질의 (11/21)

- 현재 시행중인 사후확인제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하고, 총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총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를 위한 전수조사 로드맵 마련, 기준 초과시 벌칙 규정 신설, 공공부문부터 기동식(라멘)구조 시공 의무화, 총간소음표시제 도입, 총간소음 관리대상 확대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을 촉구하며 공개질의함



총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국토부 및 국회 국토위 공개질의서

## >>> [행사] 경실련 창립 3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참석

- 일시 : 11월 9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서강대 곤자가홀



경실련 창립 3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참석

## >>> [토론회]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첫 번째 토론회

- 일시, 장소 : 12월 20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 순서 :
  - 사회 : 배기목 대전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1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 발제2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의미와 한계 (진광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금기정(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 조은경(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연구교수), 홍주희(주 태승알앤디 이사/교통기술사)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첫 번째 토론회

## >>> [성명] 정부의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1/9)

- 국토부가 지난 6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가지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함.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구역임. 또한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경실련은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다시 후퇴시킴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개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 >>> [분과활동] 보고

### ■ 교통분과 1차 정기회의

- 일시, 장소: 7월 26일(화) 오후 5시, 한국교통연구원



#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 ■ 재생분과 1차 정기회의

- 일시, 장소: 8월 18일(수) 오후 3시, 원광대학교



## ■ 주거분과 2차 정기회의

- 일시, 장소: 8월 22일(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 분과 3차 정기회의

- 일시, 장소: 8월 19일(금) 오후 5시, 경실련 강당



## ■ 분과 4차 정기회의

- 일시, 장소: 9월 30일(금) 오후 5시, 경실련 강당



## ■ 안전분과 1차 정기회의

- 일시, 장소: 10월 19일(수) 오후 6시, 경실련 1층 카페



### 분과위원(정책위원) 모집

도시개혁센터 분과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사무국(02-3673-2147/dongi78@ccej.or.kr)으로  
문의해주세요. ^^



# 도시개혁센터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아래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신 뒤 스캔하시거나 사진으로 찍은 파일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dongi78@ccej.or.kr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아래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시고 자르신 뒤에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 종로구 동승3길 26-9 3층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우편번호: 03085)

\*온라인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누르시고 가입한마디에 '도시개혁센터 회원' 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 경실련 홈페이지(ccej.or.kr)로 들어오셔서 '후원회원가입' 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큐알코드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 경실련과 함께 걷는 길

### 회원정보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름

(단체 및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원하시면 주민번호 기재)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우편물 수령지)

#### 가입동기

- 추천 (추천인: )
- 토론회, 행사 (행사명: )
- 인터넷, SNS  기타 ( )

### 회비납부 방식

(CMS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택1)

<input type="checkbox"/> CMS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예금주	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 불가)	카드번호
출금은행	유효기간 월/ 년(숫자4자리)
생년월일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b>납부금액</b>	
개인 (매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법인 (매월)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일시) <input type="checkbox"/> 60만원 <input type="checkbox"/> 12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문의) 회원팀 02-766-5627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회비 수납
- 수집항목(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자필 필수))

### 증액 신청서

경실련 회원님, 회비를 증액해 주세요!

이름	주소
회비증액 현 회비에서 ( )원 증액합니다.	
정보갱신 (변동사항 있는 경우만)	
연락처	
E-mail	
주 소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일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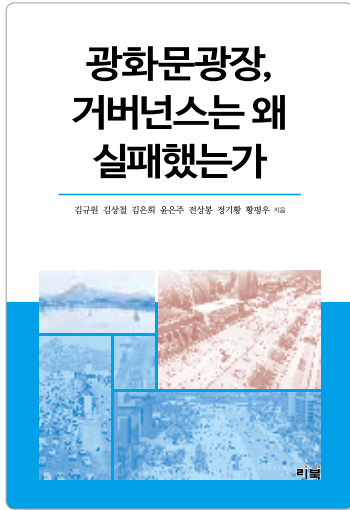
## 회원 명단

강미현	공병준	곽 도	곽총삼	권영진	권 일	김경희	김광만	김근영
김금옥	김기성	김덕기	김도영	김무성	김미경	김민완	김범일	김석기
김선아	김성수	김세용	김재익	김정곤	김준현	김진오	김천일	김태호
김형욱	나경준	노웅래	류성룡	류중석	민범기	박경난	박근오	박상위
박성우	박연환	박영민	박영웅	박정윤	박찬우	박현준	박희정	배웅규
백남철	백인길	서민호	서순탁	신행숙	심재민	안세원	안정준	양원철
여춘동	우선희	우혜인	유성하	윤영주	윤은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준
이상현	이상협	이양재	이유미	이은재	이제선	이창수	이희승	임영희
정성훈	정애리	정영일	조돈철	조은경	진광성	최강림	최광걸	최두호
최명철	최봉문	최상희	최성진	최윤정	최정우	최충익	하동익	하성규
					한상훈	허도한	현철재	황지욱

(총 94명)

# 시민의 삶을 바꾸는 거버넌스, 더 잘할 수 없을까?

광화문광장 거버넌스 실패를 기록하며 다시 희망을 다듬다



광화문광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오랜 시간 시민들의 논의가 있었다. 이 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광화문광장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이자 ‘중간 결산’ 백서다. 광화문광장을 함께 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거버넌스 과정과 성과, 실패와 희망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기록하였다.

분명 아쉬운 실패로 끝난 광화문광장 거버넌스였지만, 그 실패를 단순한 ‘회한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다. 아직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둘러싼 거버넌스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절하지 않고 모두의 광화문광장을 위해 설 틈 없이 달려왔던 많은 시민사회단체, 각기 다른 현장에서 광화문광장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외로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언제나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실패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곧 있으면 다시 광화문광장이 돌아온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아쉬운 선택들 그리고 실패해 버린 거버넌스를 간직한 채 돌아오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사를 준비해야 할까?

함께 기록해 주신 분들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김은희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장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정기황 시민법인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동국대학교 겸임교수